

5G 과장광고 논란

“LTE 20배 속도 거짓”... 공정위, 이통3社 과징금 336억

‘20Gbps’ 소비자 이용불가 판단 근거없이 자사 속도 우위 선전 “실제 속도 0.8Gbps... 허위·과장”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거짓 광고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역대 표시광고 사건 중 두 번째로 큰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5G의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는 이론상으로는 가능하고 소비자가 이용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SK텔레콤, KT, 엘지유플러스(이하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자사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총 336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서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보다 빠르다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와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고했다.

이동통신 3사는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2019년 4월3일을 전후로 집중적으로 이 같은 광고를 냈다. 광고를 통해 ‘최고속도 20Gbps’,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2GB 영화 한 편을 1초 만에 다운로드’, ‘5G 속도도 SK텔레콤이 앞서갑니다’, ‘전국에서 앞서가는 KT 5G 속도’, ‘5G 속도 측정 1위! 유플러스가 5G 속도에서도 앞서갑니다’라고 했고, 공정위는 이를 모두 허위과장광고로 봤다.

공정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광고가 전달한 인상,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해 이 사건 광고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제 속도가 0.8Gbps(2021년 3사 평균)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광고상 속도는 실제 사용환경과 상당히 다른 상황을 전제할 때만 도출될 수 있는 결과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인정된다”며 “자사 소속 직원이 측정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측정 결과만을 근거로 다른 사업자의 속도와 비교했다는 점에서 부당한 비교광고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동통신 3사는 5G 기술표

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소비자가 실제 사용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부풀려 광고했지만, 자신의 5G 서비스의 속도가 실제 20Gbps라는 점을 전혀 실증하진 못했다. 공정위 조사결과이동통신3사가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대역폭으로는 20Gbps를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28GHz 고주파 대역을 지원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비중도 출시된 적이 없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큰 이동통신 시장에서 통신 기술세대 전환 시마다 반복되어온 부당광고 관행을 근절했다는 점, 통신 서비스의 핵심 성능지

표인 속도에 관한 광고의 위법성을 최초로 인정한 사례로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같은 공정위 제재 결정에 대해 SK텔레콤측은 “통신기술의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한 광고임에도 법 위반으로 판단한 이번 결정은 매우 아쉽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대응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위 의결서 수령후 세부 내용을 파악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이통3社 “이론상 속도 설명한 것... 장점 강조 취지”

공정위 판단에 아쉬움 토로 “의결서 수령하는 대로 대응”

이통3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5G 속도 부당 광고 제재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새롭게 선보인 5G를 알리기 위해 장점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였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24일 이통3사는 5G 서비스 속도 거짓과장, 기만적인 광고, 각사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행위 등으로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36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판단에 이통3사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새로운 기술

이 상용화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특장점을 조금 더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극대화해 표현하려던 취지였다는 것이다. 20Gbps의 경우 전국망으로 사용하는 3.5㎐가 아닌 이통3사 모두 할당이 취소된 28㎐가 상용화된 것을 가정했을 때의 이론상 최대 속도다.

상용화 초기만 해도 28㎐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좌초되면서 현실화하지 못했다. 정부 역시 5G를 기존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점을 강조했었다.

SKT 관계자는 “통신기술의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를 충실히 설명한 광고임에도 법 위반으로 판단을 내린 이번 결정은 매우 아쉽다”며 “공정위의

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대응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소비자에게 올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T는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송부받으면 세부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LG유플러스도 “공정위 의결서를 받지 못한 만큼 추후 의결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이 사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윤정 기자 echo@

국내주가 상승·외인 리턴... 올해 순대외금융자산 17억弗 ↑

한은 1분기 국제투자대조표 “韓 대외 건전성 양호한 수준”

우리나라 지급능력을 볼 수 있는 순대외금융자산이 올해 들어 17억 달러 넘게 증가했다.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 투자하는 ‘대외금융자산’이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는 ‘대외금융부채’보다 더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국제투자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순대외 금융자산은 전 분기말 대비 17억 달러 증가한 7730억달러로 집계됐다.

순대외금융자산은 국내 거주자의 해외투자를 의미하는 ‘대외금융자산’에서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의미하는 ‘대외금융부채’를 뺀 수치다.

대외금융자산은 2조2004억달러로 전

분기 말과 비교해 317억달러 증가했다. 직접투자는 지분투자(156억달러)를 중심으로 같은기간 162억달러 늘었고, 증권투자는 글로벌 주가상승과 거주자의 지분증권·부채성증권 투자가 확대되며 367억달러 증가했다.

대외금융부채도 1조4274억달러로 전분기말 300억달러 늘었다.

직접투자는 지분투자(-30억달러)를 중심으로 19억달러 감소했지만, 국내주가가 상승하고, 외국인의 지분증권 투자가 확대되며 증권투자가 374억달러 증가했다.

대외채권에서 대외채무를 뺀 순대외채권은 3562억달러로 집계됐다.

대외채권은 1조212억달러로 장기대외채권보다 단기대외채권이 더 큰폭으로 줄면서 5억 달러 감소했고, 대외채무

는 단기외채가 예금취급기관 차입금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장기외채가 더 크게 줄면서 3억 달러 감소했다.

준비자산 대비 단기외채비율은 40.8%로 1.4%포인트(p) 상승했다. 준비자산의 증가(29억달러)에도 불구하고 단기외채가 더 크게 증가(+72억달러)하면서 3분기 만에 상승 전환했다. 대외채무 대비 단기외채는 26.1%로 1.1% 상승했다.

유복근 국외투자통계팀장은 “우리나라는 GDP의 40% 이상을 순대외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순대외자산국 지위를 2014년부터 유지하고 있다”며 “외환보유액도 세계 9위 수준인 상황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의 대외 지급 능력과 외채 건전성 측면에서의 대외 건전성은 양호하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현대차·환경부 등 민관 어벤져스 속속 집결

▶▶ 1면 ‘갈길 먼 수소 모빌리티’서 계속

2024년 CR-V 기반 수소전기차 출시로 다시 수소차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포부다.

◆ ‘협력’으로 수소 벨류체인 구축

인프라 구축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소 시장으로서는 완성차 업계의 수소차 발전 외에도 필요한 손길이 많다. 특히나 안정적인 수소 시스템이 구축되면 충전 인프라와 유통 인프라 구축이 과제로 꼽힌다.

국내에서는 현대차와 SK E&S 등 수소 개발에 투자 중인 7개 기업이 정부 지자체와 손잡고 ‘수소버스’를 보급하는 등 실제적인 시스템 도입에 나서고 있다. 참여기업의 통근버스를 2023년까지 250대 이상, 2026년까지 2000대 이상

수소버스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부는 협약목표 달성을 위해 수소버스의 구매 보조와 성능보증 기간 확대를 추진해 주고, 수소충전 기반 확충과 관련 기업 및 운수사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확산을 위해 정책적·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수소버스 제작사인 현대자동차는 협약목표 달성을 위한 수소버스를 충분히 생산·공급하고, SK E&S는 수소 통근버스 운행 시 충전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액화수소 충전소를 적재적소에 설치해 운영한다. 지자체는 신속한 수소버스 전환을 위해 충분한 구매 보조금 확보와 적시 집행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수소충전 기반 확충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허정원 기자 zelkova@